

대법원 2025두3297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

위탁받아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탑승기준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 국가인권위원회가 ...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안의 개요 (원심 인정 사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는 경우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2. 2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등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 당시 적시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 나아가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26조 제2항, 제47조 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 이 문서는 판결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사안의 개요·이유 중 핵심 부분의 발췌임.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